

# 노영민, 결국 반포 아파트 판다 성난 민심에 백기 “신속 매각”

### 輿, 다주택 고위공직자 논란 정리...靑 비서관급 이상 이달 처분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의 “뜰뜰한 한 채” 논란이 고위공직자 전반의 다주택 문제로까지 번지며 민심이 끓어오르자 여권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문제와 별개로, 다주택 고위공직자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정책 수립 주체인 정부와 여권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쳐 정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도 이날 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팔겠다고 밝힌 충북 청주의 아파트도 지난 5일 매각 계약을 해 곧 무주택자가 된다.

노 실장을 필두로 여권에서는 일제히 다주택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이달 내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머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처

분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하고는 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주택자 고위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1채를 뺀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 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처분을 ‘대국민 약속 준수’, ‘신속성’ 등 2가지 원칙에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을 2년 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서약을 받았다. 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42명이 다주택자이다. 이 가운데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12명이다.

김태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정확한 (부동산 보유)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의원들이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이 실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다주택 논란을 정리하면서 부동산 대책 수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하는 등 관련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전날(7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다.

김윤호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지휘권 발동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秋 “오늘 10시까지만 기다릴 것”... 공식행사도 불참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지휘권 발동에도 7일째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가운데, 9일 예정된 공식행사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예정된 교정대상 시상식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대신 법무부 차관이 주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시상식은 공개 행사로, 당초 추 장관은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차를 하루 더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며 “오늘내일이 중요한 날인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 나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지난 6일 오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 방문차 오 후 반차를 쓴 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연가를 냈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벌써

일주일이지났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총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된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지원단(자문단) 절차 중단과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 및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한 뒤,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를 수용할지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은 지난 6일 검사장 회의에서 자문단 절차는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추 장관 수사지휘 중 총장 지휘 감독 배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게 다수의견이었다는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에도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로 7일째 공식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휴가 중 사찰에 머물고 있는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고 적었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추 장관 입장 표명에 앞서 “검일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없다”며 현재까지는 윤 총장 입장발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트럼프 “도움 된다면 김정은과 다시 만나겠다”

언론 인터뷰서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알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사전 녹화된 그레이TV ‘폴코트프레스’ (12일 방송 예정)와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난 그들(북한)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우리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특히 “만약 그것(3차 북미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하겠다(I would do it if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helpful)”면서 “난 그(김정은)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작년 2월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에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2차 회담 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대상·방식과 그에 따른 미국 측의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한국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관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으나, 같은 해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북미 간의 가시적 접촉 또한 끊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난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 우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리 잃은 사람도 없고, 죽인 사람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1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세미나

이게호 · 위성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